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백서

2018. 07 — 2020. 06

# HAPPINESS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

세종시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입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은  
우리 세종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행안부와 과기부, 세종시에 등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22** 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12부, 3처, 3청, 2위원회, 2실

중앙행정기관 총 54개

세종 22, 수도권 20(서울 16, 과천 3, 인천 1),  
대전 8, 전북 2, 충북 2



2019. 02. 25 행정안전부 현판식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았던 중앙행정기관이 속속 세종시로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우리나라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수립, 국무회의 서무, 법령과 조약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 인사, 전자정부 운영, 정부청사 관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지원,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공무원에 관한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이다. 따라서 행안부 이전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평가이다. 같은 해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과기부 이전은 행정효율 향상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시와 가까운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에 유리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4차산업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연계와 협력으로 국정 효율을 높인다

그동안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과 세종시로 나뉘어 있으면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체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행정기관을 집중시켜 부처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지역과 부처 간 이해관계 등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필요와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한편,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힘썼다.

## 22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과 세종시의 노력은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2020년 8월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전하면서 총 54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는 '행복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률 정비도 속도를 내면서 다소 안갯속에 있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그림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 여가부 등 수도권 잔류기관 이전 추진

세종시는 현재 여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자문위원회 이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위원회 추가 이전 등을 청와대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더불어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기관을 신설할 경우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추가적인 법률 정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세종 - 대전 - 충청권 상생의 길

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



지난 2019년 3월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세종시에서 출범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2018년 12월 1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 공포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되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 · 사업을 집행하는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합의를기로 구성되며, 대도시권별 현안은 5개 권역별 위원회(수도권, 부산 ·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 행정 경계의 한계를 극복하자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다. 그만큼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 · 투자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였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 이뤄지면서 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이 함께 정비되면서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 되었다. 특히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추으로써 광역교통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문제해결 속도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19년 10월 3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방향과 모습을 담은 기본 구상으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권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세종-대전-충청권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에 힘이 실렸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24년까지 추진된다. 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에 포함됐던 ‘세종~청주 고속도로’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본궤도에 오른다. 세종시와 수도권을 철도로 연결하는 ITX 세종선이 충청권 공동지지를 얻어 본격 추진되고, 대전 · 충청권과의 연결을 위한 대전-세종 광역철도, 기존선을 활용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추진된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조치원읍, 공주시 등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이 추진된다.



#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2020. 05. 07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

2019년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돌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2015년에 50%를 넘어서는 등 인구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불러왔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환경 오염과 교통혼잡, 지방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소도시 등 지역 간 양극화는 뚜렷해졌고, 일부 지역은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의 활력을 높이고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였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헌법재판소의 신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써 꾸준히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미 22개 소속기관을 포함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였고, 국가의 정치와 행정기능을 행정수도에 집중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발맞춰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세종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등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2019년 8월 국회 분원 설치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2019~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각각 10억 원이 반영된 부분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 다시 ‘행정수도’를 되찾아야 한다

실질적 행정수도로써 기능과 역할을 하고 하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는 개헌, 특별법 제정과 국민투표 등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위헌결정에 반하지 않으면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행정수도 완성 단기와 제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행정수도로써 세종시의 지위와 상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2007. 01. 04 세종의사당건립 정책토론회

2008. 04. 12 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결의

# 행정수도 치안 기능 강화

시민 안전 책임질 세종지방경찰청 신설



2019. 06. 25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식

세종지방경찰청이 2019년 6월 25일 문을 열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종시에도 '지방경찰청'이 문을 열면서 '행정수도' 치안 기능이 강화되었다.

초대 청장에는 박희용 경무관이 취임했으며, 청사는 당분간 소담동 소재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 세종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신축에 나서기로 했으며, 2021년에는 세종남부경찰서가 보람동에 문을 연다.

## 정부기관 입주와 인구 증가, 치안수요 급증

2012년 7월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에는 42개 정부기관이 입주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종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충남지방경찰청이 담당했던 세종특별자치시 치안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본청 조직은 5개 과(112종합상황실·경무과·생활안전수사과·경비교통과·정보보안과), 산하에는 세종경찰서와 정부세종청사경비대, 경찰관기동중대를 두었다.



2019. 06. 25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식

## 수사기능 강화,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세종경찰청은 개청과 함께 지방청 중심의 생활안전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지방청 내 광역지능수사대는 주요 강력범죄·지능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 오토바이로 구성된 교통기동순찰팀도 신설해 집회·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치안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고 있다.

관할 구역은 세종시 전체(1개 읍·9개 면·14개 법정 동)로 담당 인구는 33만 2,500여 명(2019년 6월 24일 기준)이다.



# 국제적인 콘텐츠까지 품은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유치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산하 연구·교육전문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가 세종시에 둥지를 튼다. 2019년 11월 21일 오후 2시(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는 유네스코 협력기관(카테고리 II)인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을 승인했다.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분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디지털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문화재청은 2020년 상반기에 해석센터 개소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1년 상반기에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간 협력기관 설립을 위한 협정서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일단 세종시 보람동 광역복지지원센터에 둥지를 틀고 다양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콜라보

문화재청은 201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사무국에 세계유산 국제센터 세종시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외교부와 함께 해마다 세계유산 해석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국제회의를 꾸준히 서울에서 개최하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부대행사를 운영하는 등 세계유산 해석 분야에 대한 국제 사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번 유치는 세종시와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연계와 협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 세 기관은 센터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았다.

## 국제기구 유치로 시민 권익 향상 기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유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내 위상과 영향력 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적으로는 세종시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센터와 관련해 지역 유관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유산 문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세계행정도시 시연합(WACA)’ 창립총회

세종시는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 연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써 세종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세계 도시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신생 도시가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자족기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도시건설 경험과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쌓아 경제적, 사회적으로 연대함으로써 향후 세종시 발전과정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연대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류와 네트워킹으로 미래 변화 대응

세종시는 테마별 국제교류와 협력방안 발굴로 실용적 연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7월 세종시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교류 및 스마트 도시 조성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과 MOU를 체결했다. 또 9월에는 우호도시로 인연을 맺고 있는 중국 구이저우성과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 노력에 합의했다.

2020년에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스마트 도시 정책 발굴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해 독일 본 시청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최근에는 농업·경제·도시재생 등에서 교류 과제를 발굴하고자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또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중국 구이저우성과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 19 대유행에도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세종시는 지역에 적합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단계별 행정수도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섰다.

2018년 9월에는 터키 앙카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간 연합인 ‘세계행정도시 시연합(WACA)’ 창립총회에 참석해 지구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WACA에서 세종시는 사무국, 앙카라가 의장도시를 맡았으며 누르술탄(카자흐스탄),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브라질리아(브라질)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WACA는 2019년 11월 터키 앙카라에서 집행이사회를 개최했다. 그해 12월에는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세종시를 찾아와 행정수도 건설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다자간 국제회의를 활용한 효율적인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에서 세종시 균형발전 사례와 정책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고, 2020년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유엔 세계도시포럼 참가 및 부스운영을 통해 세종시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홍보했다. 또 2020년 8월에는 지방정부 관련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에 가입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간 연대를 통한 국제적 현안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세종시는 코로나 대응과 국제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WACA 회원도시, 중국 구이저우성 등과 영상회의를 잇따라 진행했다.





'세계행정도시연합(WACA)' 창립총회에서 연설 중인 이춘희 시장



WACA 초대 의장도시인 터키 앙카라시 시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WACA 창립총회에서 회원도시 연설을 경청하는 이춘희 시장



## 국제 교류협력 행보 확대

세종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디지털 방식 소통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영상회의를 통해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2020. 8)하였으며,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와 영상회의(2020. 9)를 통해 상호간 우호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고자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영상회의에 참가해 세종시의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집행부 온라인 회의에도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2020. 11.)

한편, 올해 신규로 교류를 시작한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구급차 2대를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세종형 시민주권 실현, 제도로 구축하다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시민주권회의 출범



시민주권회의 출범

세종시민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시민들이 중요 정책과 관련해 토론회도 요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제도 마련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시정참여와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산발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했던 시민참여기구를 시민주권회의로 통합해 시민참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2018년 11월에 제정한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장과 시의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구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에 16세 이상 시민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과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민 의사결정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의무 규정으로 담았다.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사업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에는 시민이 시정 의사 형성에서 평가단계까지 참여해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규칙 내용 가운데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게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시장이 입법을 추진토록 했다. 시의 중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등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권한과 자율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 대표로 구성돼 주민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자치활동과 관련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마을단위 자치활동인 마을회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 시민주권회의 본격 활동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시민 중심 생활자치모델 '시민주권회의'가 2019년 1월 28일 첫 발을 내디뎠다. 시민주권회의는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은 10개 분과 총 239명으로 이 중 시민위원 100명을 비롯해 전문가 114명, 시의원 17명,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시민위원 공개모집 및 지원자 무작위 공개 추첨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개방성을 확대했으며, 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주권회의 구성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 시민주권회의 출범으로 시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시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고 있다. 시민주권회의는 2019년 114회,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08회 등 출범 후 200여 회 회의를 개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보 처리방안', '주민자치회 실시' 등 시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한 500여건의 안건을 논의해 세종시정의 기본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부강면장 후보자 정견 발표 모습

세종시는 2020년 6월에 연기·소정·부강면장, 보람·대평·새롬·다정동장 직위에 대한 면·동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이 뽑은 6개 면·동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8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한 곳은 세종시 20개 읍면동 가운데 18개 읍면동으로 늘었다.

면·동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는 해당 읍·면·동 회의실에서 후보로 나선 공직자들이 각자 해당 읍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대표 등 패널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기존 시장이 갖고 있던 읍면동장 임명 권한을 시민에게 나눠주자는 취지다. 이른바 시민이 직접 심사를 통해 우리 마을의 일꾼을 뽑는 시민 중심의 인사시스템인 셈이다. 특히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시민주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실험이라는 평가도 있다.

## 시민추천제, 시범 시행 후 점차 확대

세종시는 지난 2018년 8월 조치원읍에서 시범 실시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동지역으로도 점차 확대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읍면동 주민센터 후보자로 나선 공무원들이 마을운영 계획 등을 밝히면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심의위원들이 직접 평가해 최고 득점자 1명을 세종시에 추천하고, 세종시는 인사에 반영하는 체계이다. 이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설계하고 주민자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읍면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성과를 두고 그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18년 지방인사 혁신 경진대회'에서 세종시는 지방인사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시범 실시(조치원읍) 포함 2018년에는 5개소, 2019년에는 7개소, 2020년 상반기에는 8개소에 시민추천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관내 20개 읍면동의 90%인 18개까지 늘었으며, 2020년 말 소담동과 전동면까지 실시하면 세종시 모든 읍면도에 시민추천제를 시행하게 된다.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조치원읍		연동면	금남면
한솔동		고운동	연기면
도담동		조치원읍	부강면
연서면		도담동	소정면
전의면		장군면	보람동
		아름동	대평동
		중촌동	새롬동
			다정동

## 지속적인 보완 개선 노력 병행

세종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정견발표와 심사과정에 부담을 느껴 공모신청자 모집이 어려웠던 점, 일부 지역은 해당 지역 출신 후보자를 선호하는 현상, 현행 규정상 읍면동장의 권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자치권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심의위원들이 마을의 공통 현안질문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질의응답 방식을 바꾸는 한편, 공정성 저해 행위 시 해당 패널을 현장에서 퇴장하도록 하는 등 페널티 적용, 읍면동장이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등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에 교체를 건의하는 제도 마련, 시민추천제로 임기를 마친 읍면동장은 희망인사 배려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 실질적 마을협의체, 민주적 주민자치 확산

##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



2019년 주민자치회 출범식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심점인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2020년 14개 면·동으로 확대되었다. 2021년에는 세종시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마을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2019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며 4개 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해왔다.

연도	개소수		읍면동
	증가	누적	
2019년	3	4	부강면('13년 시범실시)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19년 7월)
2020년	10	14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새롬동('20. 1월), 종촌동('20. 4월), 보람동, 소담동('20. 7월), 대평동('20. 9월), 다정동('20. 10월)
2021년(예정)	6	20	조치원읍, 연기면, 소정면, 금남면('21. 1월) 아름동, 고운동('21. 3월)

##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결정하는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이 주도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을 결정하였다. 2020년 7월 기준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10개 면·동에서 문화, 환경, 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53개 마을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총회를 통해 실행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34개 사업 7억여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민총회는 비대면 형태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주민투표 K-voting(4곳), 우편 투표(2곳), 일정기간 분산투표(4개소) 등 총 10개 면·동에서 2,386명이 마을계획 수립과 결정에 투표로써 자기 의견을 전달했다.

##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세종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있어 주민 대표성을 살리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선정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주민자치위원회 30대 이하 위원이 전체 393명 중 17명(4.3%)에 불과했지만, 2020년 주민자치회 30대 이하 위원은 전체 378명 가운데 60명(15%)까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위원들이 조금 더 활력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려는 주민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으로 우리 시는 2019년 10월에 열린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 제1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부강면이 지역활성화분야 최우수상, 장군면이 학습공동체 분야 최우수상을 받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종시는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마을계획과 주민총회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분	2018년 말 기준(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2020.8월 기준(12개 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수	393명 / 평균 20.6명	378명 / 평균 31.5명
30대 이하 위원	17명 / 4.3%	60명 / 15%



# 지역에 맞는 공동체성 회복 방안 찾기

##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개소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외관

시는 그동안 주민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9년 3월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조치원을 소재)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열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사회적경제팀을 추가해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로 통합·운영하여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했다.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한 건물에 입주한 행복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교육공동체 허브 역할도 수행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2019년 3월 12일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조치원을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동지를 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기존 주민과 새로 유입된 주민들 간 유대감과 소속감을 키우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기반한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민간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동체 정책개발', '현장밀착 지원'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과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며,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센터는 주민들이 더 밀접하고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시민주권대학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읍면동 마을계획단이 마을현안사업을 발굴해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마을자원조사 및 유형별·지역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등을 통해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로 이전·통합

세종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로 이전·통합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과 컨설팅 중심의 역할이 마을공동체는 물론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까지 활동 폭을 넓히며 지역에 더 많은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4개팀(사회적경제팀, 주민자치팀, 마을공동체팀 등)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컨설팅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돕는 등 종합적 지원을 한다. 주민자치팀은 2021년 모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발맞춰,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간다. 마을공동체팀은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 조직화와 공익활동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돕는다.



# 함께 공부하는 주민자치와 시민주권

## 시민주권대학 운영

2020년  
시민주권대학

**7** 개 지역  
주민자치회  
과정  
227명, 70.9% 수료

**19** 개 읍면동  
마을계획  
과정  
414명 참여

**44** 명  
마을활동가  
(마을나래 양성)  
과정 63.6% 수료



시민주권대학 참가자들

세종시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민주권대학을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세종시가 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시민주권대학은 총 12시간에 걸쳐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시민주권 특별자치 시의 이해, 마을의제 발굴과 공동체 문제해결, 주민자치 운영 사례 등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시범운영으로 모두 3기에 걸쳐 16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마을로 돌아가 활동가로서 활약했다.

## 시민주권대학 확대 운영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시민주권대학은 주민자치·마을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마을 활동가(리더)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마을 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해 진행한 2019년 시민주권대학은 ‘시민주권 바로알기’ 상·하반기 과정(6개반 248명 수료), ‘주민자치회 과정’(7월: 장군, 한솔, 도담 / 11월: 부강), 마을계획 찾아가는 주민회의(21회), 교육(20팀, 6주 과정), 공유회(195명 수료) 등으로 진행됐다.

2020년에는 주민자치회 과정, 마을계획 과정, 마을활동가(마을나래 양성) 과정으로 진행해 마을계획사업 발굴과 주민참여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시민주권대학은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지역 위원을 대상으로 마을의 일을 기획하고 결정·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과정,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계획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 마을에 활기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

시민주권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이 늘고, 또 이들이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인재로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주민자치회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또 마을계획사업 발굴 확대로 주민 직접 참여가 확대되었고, 마을활동가들이 본격적으로 공동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공동체성 회복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세종시는 2021년에 전 읍면동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주민자치회 안정화를 돕는 교육으로 시민주권대학을 재편할 계획이다. 또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의 ‘집현전’과 연계해 운영하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해 이론교육과 온라인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과 비대면 공동체 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 마을 정보 한눈에 쏙!

세종 사랑방 맵 구축



2019년 세종시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세종시는 자체 기획한 ‘한눈에 알아보는 세종 사랑방 맵(Map) 만들기’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9년 국민 디자인단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세종 사랑방 맵’은 지역 시민이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하는 동시에 시민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세종 사랑방 맵’은 공무원과 주민이 마을공동체 및 문화정보를 발굴·등록함으로써 마을공동체와 문화 활동에 대한 주민의 생생한 이야기가 공유되는 커뮤니티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해 세종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한 도시’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복안이다.

## 세종 사랑방 맵 국민디자인단 출범

2019년 6월 29일 세종 사랑방 맵(Map) 사업을 추진할 2019 세종시 국민디자인단이 출범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인 국민, 서비스 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 전반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한눈에 알아보는 세종 사랑방 맵 만들기’ 과제는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에 마을공동체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첫 과제로 진행했다.

세종시 국민디자인단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사랑방 맵 구현을 위해 10회 이상의 워크숍, 토론회 등을 거쳐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세종시는 2020년 하반기 중에  
세종 사랑방 맵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이후 사용자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  
시민들의 사랑방 맵 이용과  
참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세종 사랑방 맵(Map)  
공무원과 주민이 마을 공동체 및  
문화정보를 발굴·등록

마을공동체,  
문화활동에 대한 주민 소통

커뮤니티로 성장



국민디자인단이 세종 사랑방 맵 사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 마을자치 실행력을 높이는 재정적 뒷받침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599** 개 사업  
2020년  
자치분권특별회계

**159** 억원  
읍면동 140억 +  
본청 19억



2019년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세종시는 2019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편성해 기존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사회경제조직 지원 사업, 지역문화 행사 사업 등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과 통·리 단위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시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 세우고 주민이 마을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골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 예산에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 읍·면·동에 자치분권 특별예산 수억 원씩을 배정했다.

## 전국 첫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종시는 2018년 11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2019년 본예산에 159억 원(읍면동 143억, 본청 16억)을 확보해 총 535개 사업에 투입됐다. 2020년 본예산 역시 159억 원(읍면동 140억, 본청 19억)을 확보해 599개 사업을 뒷받침했다. 전국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정책대상에서 '정책상'을 받기도 했다. 학회는 주민세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바람직한 주민자치 모델을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2020년 1월 31일에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우수사례 공유회'가 열렸다. 우수사례 공유회는 2019년에 추진한 읍·면·동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 중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수사례 추진 노하우를 전파,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시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매뉴얼과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지역은 물론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다른 자치단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 특별회계 운영으로 안정적인 자치재정 확보

세종시는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와 이에 상응하는 시 예산을 주민자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마을 조직과 입법, 마을계획, 마을경제를 시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또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재정 민주주의가 구현되었고, 이후 세종시의 모델은 여러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 세종형 주민기록자치 실현

마을기록문화관 개관 · 운영



마을기록문화관 개관식

세종시가 세종형 기록자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기록물 보존·관리 시설인 마을기록문화관을 건립하고 2019년 12월 9일 문을 열었다. 마을기록문화관은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생산된 마을회의, 마을 계획, 마을소식지 등과 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기록물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건립됐다. 옛 연동면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마련한 마을기록문화관은 1층에 상설 기록전시실과 사무공간, 2층에 기록보관소, 주민기록실, 교육·회의를 위한 다목적실 공간을 갖췄다. 시는 시설을 활용해 주민자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관리하는 한편,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회 개최, 시민기록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록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기록물 관리 공간의 개념을 넘어 이곳에서 마을소식지 편집·발간 등 주민자치기록이 가치 있게 생산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록과 문화가 공존하는 주민자치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자치를 기록하고 남기자

마을기록문화관은 기록자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18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 3억 4,0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건립했다. 문화관 건립 전 과정은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협의회 등 시민조직과 명칭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공간설계와 운영방향 등을 설정했다. 이어 2019년 9월에는 「세종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문화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019년 11월에 준공해 12월에 문을 열었다. 문화관은 개관에 맞춰 '기록자치의 실천문화, 세종에서 꽃피우다'라는 제목으로 주민자치와 기록자치 홍보 기획전시를 진행했다. 또 읍면동에서 마을계획과 신문, 소식지, 미디어, 회의록, 운영세칙, 공동체 활동 기록 등 주민자치 기록물 수집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 들어서는 주민해설사(자원봉사)를 모집하는 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문화관이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다졌다. 전국 첫 사례였던 만큼 마을기록문화관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건립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 6월에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고, 202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에도 선정되었다. 또 타 자치단체와 주민자치활동 관계자들이 방문해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 기록관리의 영역을 확장하다

마을기록문화관은 민간의 주민자치 영역 기록물을 가치 있는 정보자산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전국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이다. 그리고 주민자치활동 전 과정을 기록으로 체감할 수 있어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관이 단순 전시시설이 아닌 주민기록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기록의 생산·활용을 지원하는 등 주민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주민자치기록물 보존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록의 생산과 보유현황 조사·분석, 수집·보존·관리·활용 기준을 만들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자문단 운영과 주민자치회와의 소통·협력체계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문화관에 대한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모집, 민관 공동전시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우리 문제는 우리가 살핀다”

아동청소년의회 출범



제1기 아동청소년 의회 발대식에 참석한 이준희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시 아동·청소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제1기 아동청소년 의회’가 2020년 6월 13일에 공식 발족했다.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아동청소년 의회가 의회활동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모집과정을 거쳐 선정된 30명의 아동·청소년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원 배지를 전달했다. 발대식 후에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예산교육도 진행했다.

## 아동·청소년 정책, 직접 행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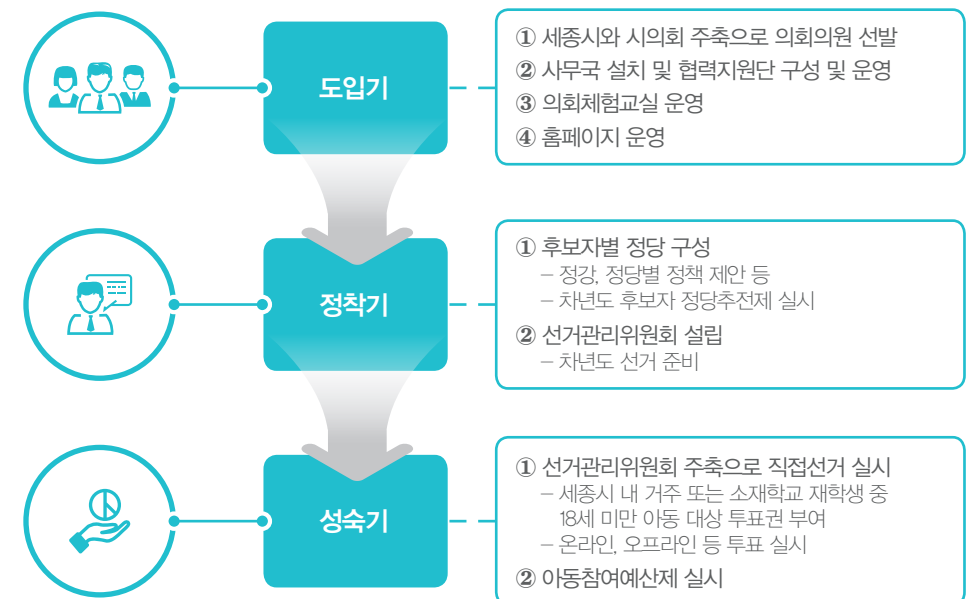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의회는 1년간 ▲예산안 심의 ▲5분 발언 ▲현장 체험 ▲성과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과 권리 증진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기 의회 구성은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학교장 추천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공개모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회는 교육인권과 문화환경 2개 상임위원회로 구성했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회 위원장 2명을 선정했으며, 참여 의원들은 민주적인 리더십과 정책참여역량을 키워가게 된다.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을 돕기 위해 시와 교육청, 퍼실리테이터가 함께 사무국을 꾸렸으며, 여기에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회 단계별 추진계획





# 시민이 계획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적인 예산편성

## 열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제4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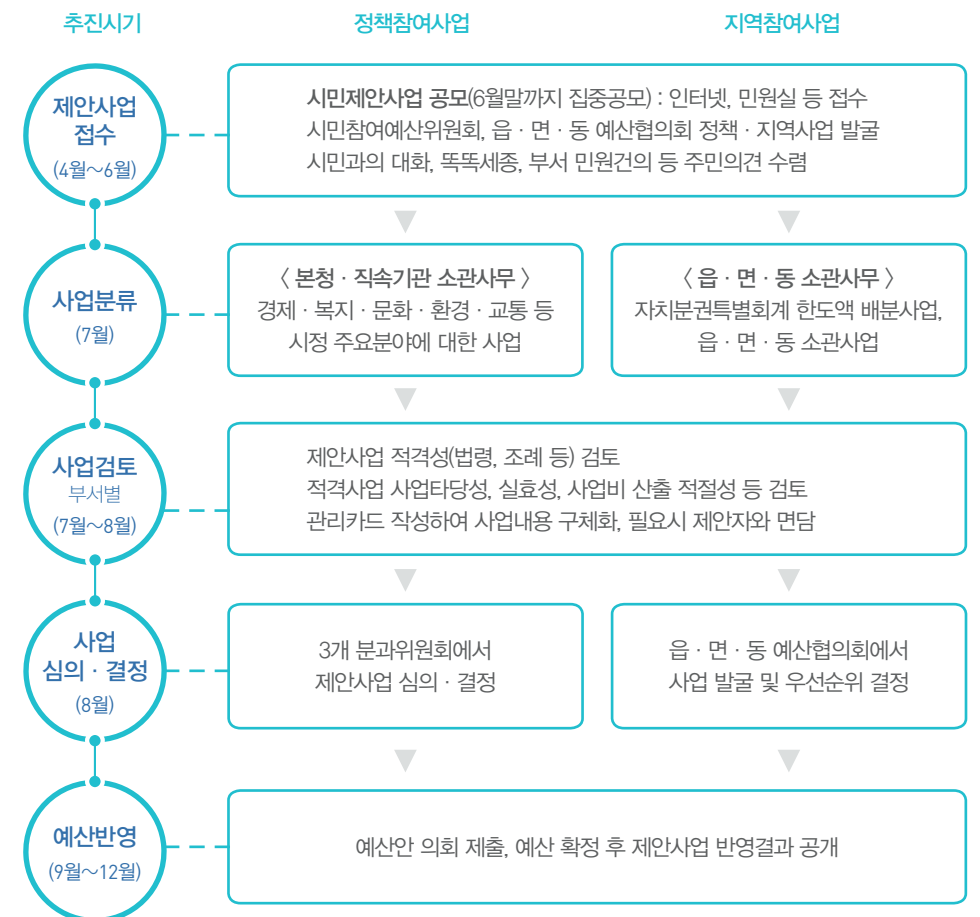
세종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분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열린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직접 시정 발전과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분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업을 내년도 시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민이나 지역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생활 불편 해소부터 안전, 복지, 도로, 교통, 문화·예술, 환경 등 시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제안을 받는다.

## 공모, 교육, 심의, 결정

2019년 4월에는 위원 30명으로 네 번째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됐다. 제4기 위원회는 2021년 4월 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워크숍과 아카데미를 거치며 예산편성과 사업심의를 위한 기초 소양을 닦는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인터넷과 우편, 팩스, 민원실을 통해 접수가 이뤄졌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과의 대화, 토크세종, 부서 민원 건의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9월에는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심의가 3개 분과에서 이뤄져 789개 사업 1조 3,078억 원을 심의했다. 또 읍면동 예산협의회에서는 제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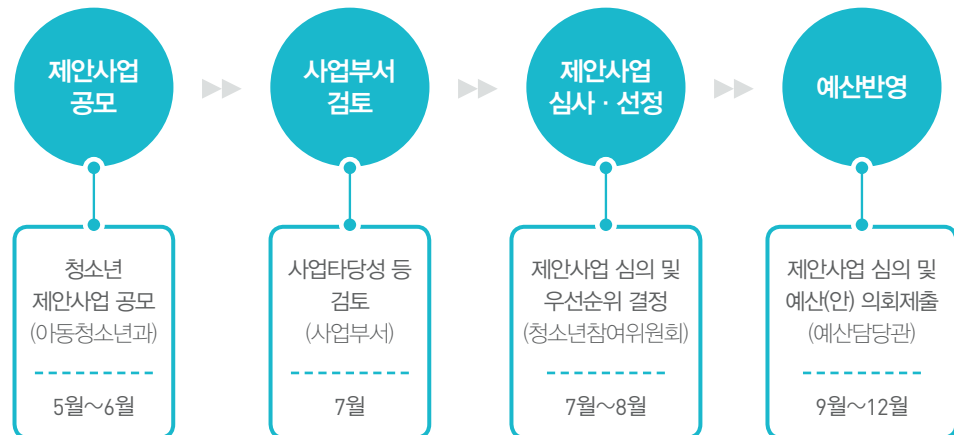
원회 현황

구분	인원	주요기능	비고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29명	•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수렴 등 ※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제4기 (‘19. 04.~’21. 04.)
읍면동 예산협의회	각 15명 이내	• 지역사업 발굴제안 및 우선순위 결정	

청소년도 예산편성의 주체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결정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예산과정의 주체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다. 공모는 만 9~24세로서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사업은 청소년의 체험·봉사, 진로·학습, 복지·여가 활동 및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등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다.

운영체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사업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예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제안취지에 맞게 사업이 계획되었는지, 또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분과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리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나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년도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단위 | 백만 원, 건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액	14,030	13,921	9,807
	건수	585	447	335
시민참여 제안사업	예산액	690	313	6,925
	건수	14	8	6



#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공동체

## 세종절전소 운영



2019년 세종 절전 페스티벌

세종시는 2019년 공동주택단지 4곳을 대상으로 '세종절전소'를 시범운영한 결과, 1년간 전력사용량 30만kWh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수치로 전기세로 환산할 경우 4,200만 원을 절약한 셈이다.

세종절전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운동으로, 발전소 같은 별도의 건물이나 플랜트를 세운 것은 아니다. 이는 절전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절약 목표를 달성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절약 공동체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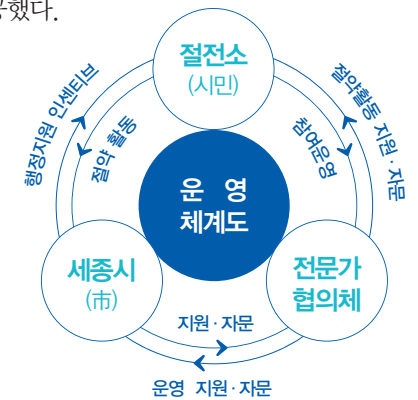
## 절전 분위기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

세종시는 2018년 11월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공동주택(아파트) 4곳을 선정해 2019년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은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중촌동 가재마을 4단지, 아름동 범지기마을 9단지, 보람동 호려울마을 6단지이다. 사업의 목적은 주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 개인의 절약을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공동체 복원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세종절전소에 참여한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전문가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냉장고 온도 낮추기와 경관등 격등제를 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지하실·엘리베이터 등의 일반전구를 고효율전구로 교체하는 등의 절약운동을 벌였다. 또한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절전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받은 뒤 가정에서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개별적인 활동도 벌였다. 시범사업과 더불어 세종시는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절전 의식을 일깨우고자 '절전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시행 후 1년이 된 2019년 12월에는 목표를 달성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전용 LED 등기구(1,198세대) 및 스마트미터기(687세대) 교체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기능·역할**

절전소 절약목표 설정, 자발적 실천  
세종시 절전소 행정지원, 인센티브 부여  
전문가 협의체\* 절약활동 지원, 교육 자문

\*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



## 세종절전소 운영 확대,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 뽑혀

이듬해인 2020년, 세종시는 세종절전소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새뜸1·4·6·11단지, 범지기1·8단지, 죽림 신동아 파밀리에 조치원자이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9곳을 세종절전소로 추가 선정했다. 세종시는 신규 세종절전소에 지난해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절전 실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절전소는 에너지 절약,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 시민이 감동하는 일상 함께 만들기

##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설치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출범식

2020년 2월 세종시는 시장이 직접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동안 특위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가로수 정비 등 8개의 시민감동 과제를 선정하여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일상의 불편함, 빠르게 체계적으로 해결

1호 과제인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특위는 4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상반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10개소),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 등 8개 세부과제를 시행 또는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2호 과제인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정비'는 단기 및 중기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단기 과제로 LH와 함께 8개 구간에 4,655그루의 가로수를 심었으며, 하반기에는 2개 구간에 1,157그루의 가로수를 심었다. 또 상반기에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생육환경 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담은 중기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3호 과제인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과속방지턱의 충격을 줄이는 사업으로 민원이 잦은 과속방지시설 10개소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철거하거나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호 과제는 금강과 체천·방축천에 꽃을 심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시민이 힐링하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금강·방축천·체천 인근의 주민, 단체 150여명이 참여해 직접 고른 꽃을 심고 가꿀 예정이다. 5호 과제는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억제, 보호구역 지정 확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등의 대책을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이 함께 마련한다. 6호 과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대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특위는 ▶도로변 불법현수막 정비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친수공간에 시민들이 선정한 꽃을 심고,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왔다. 금강 보행교 친수공간과 자전거도로는 인근(보람동·대평동·소담동)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유지·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금강변의 각종 시설물을 항상 꼼꼼하게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친수환경을 제공한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분임토론



## 어르신의 일상을 행복하게

특위는 2021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확대와 운영인력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개선과 청소년위원 참여 활성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7호 과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으로 3개 분야, 12개 해결과제와 8호 과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4개 분야, 15개 해결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자 지원,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두루타 버스 확대 운영, 경로당 이용 불편사항 신속한 해결 등을 향후 계획으로 꼽았다. 또 특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위원 선정 절차를 개선해 주민자치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위원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청소년 행사에서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 체험 발표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마을계획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민참여제도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현장 점검

## 감동과제 추진 현황('20.8월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건

과제명	담당부서	비고
〈1호 과제〉 도로변 불법현수막 정비	경관디자인과	추진완료
〈2호 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정비	산림공원과	추진완료
〈3호 과제〉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교통과	추진완료
〈4호 과제〉 친수공간 조성	치수방재과	추진완료
〈5호 과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교통과	추진완료
〈6호 과제〉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체육진흥과	추진완료
〈7호 과제〉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8호 과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발전 방안	참여공동체과	추진중



시민감동특위 추진체계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가로수 소위 회의 모습

